

# 제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

2021. 2. 18.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2월 18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도 규 상 위 원 장

최 훈 위 원

윤 석 현 위 원

이 승 현 위 원

위 성 백 위 원

#### 4. 회의경과

(15시 00분 개회)

#####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1년도 제2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3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021년도 제2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3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既송부한 자료로 보고에 갈음함

#####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49호 『네이버파이낸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50호 『이베스트투자증권(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51호 『자이랜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52호 『농협손해보험(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53호 『신한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54호 『(주)루트에너지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55호 『신한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1년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비스로,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는 등 금융혁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내용

○ (위원) 네이버파이낸셜(주) 혁신금융서비스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신용위험 문제가 있음. 부가조건으로 ‘최대 30만 원’을 제안하셨고, 기본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고려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것이 정기적으로 법제화된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인정해 줄 경우 신용위험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업자의 적격성 문제를 꼭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후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림.

○ (보고자) 후불결제서비스를 선·직불을 위주로 하는 전자금융업자의 부수업무, 겸영업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음. 성안(成案) 과정부터 당연히 논란이 많았었고, 특히 신용카드 회사들의 산업적 측면에서 반발도 많았음. 다만, 규제샌드박스로 우선 추진하는 취지 자체가 이런 후불결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회초년생들, 금융이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 혁신적인 포용금융차원에서 도입된다는 측면에서 30만원으로 제한한 것임. 그리고 30만원도 회원이 많다면 신용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 때문에 신용카드업처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같이 신용카드에서 부대업무가 될 수 있는 업무들을 부가조건에서 최대한 배제하였음. 그리고 반드시 선·직불결제의 부수하는 형

태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밖에 대손충당금 규제라든지, 전체 후불결제 비중을 '(총여신잔액) 분기별 총여신잔액은 사업자의 직전분기 총 결제규모의 20%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본업이 선·직불결제인데 후불사업이 본업이 되는 것을 막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음. 이런 부분들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이런 보완장치 하에서 앞으로 법이 개정되고 나서 시행령이나 감독규칙 등을 통해서 행위규칙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음. 앞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음.

- (위원) 입법과정부터 신용카드 회사에서 영역침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좀 있었음. 실제로 네이버파이낸셜(주)처럼 빅테크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선불충전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용하다보면 잔액이 부족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를 예상해서 후불결제를 조금만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던 것이고 신용카드를 발급 못 받는 사람들에게 금융이력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56호 『편딩플랫폼에셋대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57호 『(주)머니비앤비소셜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58호 『(주)브리편딩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59호 『(주)인컴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60호 『(주)후담클라우드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61

호 『(주)가자핀테크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62호 『(주)미다스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63호 『(주)빌드인베스트펀딩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64호 『케이트대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펀딩플랫폼에셋대부(주) 등 9개 대부업자가 고정사업장 미비, 소재지 불명,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무실적 등 등록취소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등록취소를 처분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택연금 가입저변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예 따라 하위 시행령을 정비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6호 『(주)♀♀♀♀♀♀(舊,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7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前대표이사 및 회계담당직원에게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주)◇◇◇ 대표이사 ○○○임. 먼저, 당사에 대한 감리로 인하여 금융 당국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사는 사안의 중요성을 무겁게 느끼고 있고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분에 대해 다루는 회의라고 알고 있으며 동기판단 여부에 따른 과징금의 차이가 상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진술을 하고자 함. 당사는 본 건 감리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재무제표를 정정공시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였으며 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을 받는 등 즉각적으로 사후조치를 완료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위법행위의 동기와 관련해서는, 모든 위법행위에는 거기에 딱 들어맞는 동기와 목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재무상태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살펴보다라도 해당 매출을 통해 당사가 특별한 이득을 볼 것도 없고 특별히 득이 되지 않는 일을 고의로 회계규정을 어겨가면서 진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을 깊이 살펴봐 주시기 바람. 그간의 위원회에서 받은 질문들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을 유추하여 당사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첫째, 제보자나 다른 퇴직자의 진술을 근거로 할 수 있을 것 같음. 허나, 이것은 퇴직을 하면서 당사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일방의 주장일 뿐 고의판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당사는 해당 행위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보자나 다른 퇴직자에게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함. 둘째, 관련서류에 前대표이사의 서명이 있는 점을 근거로 할 수 있을 것 같음. 이와 관련해서는 SI영업거래구조가 복잡한 점, 영업담당자가 해당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거래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실제 영업담당자들도 前대표이사에게 해당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서로 밝히고 있는 점 등으로 SI영업의 경우 前대표이사가 해당 내용을 알기 힘들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였음. 셋째, 관례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할 수 있을 것 같음. 허나, 당사는 위법적인 행위를 관례적으로 했다고 주장한 바가 없음. 복잡한 SI업계 거래구조가 관례적이라는 것이지, 관례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복잡한 SI거래 중 일부 거래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한 것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근거도 모두 반박가능한 내용이지만 이 사안들을 논외로 하더라도 도대체 당사는 무슨 이익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였나 하는 점임. 당사의 행위를 고의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통해서 당사가 어떠한 이익을 누렸는지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지난번 안전검토소위원회(이하 안검소)에서 보고자가 前대표이사가 본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진술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는지?
- (보고자) 그러함. 감리 초기에 감리착수하자마자 바로 감리반에서 3명이 회사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현장조사 나가자마자 대표이사가 회계분식을 했다, 그리고 매출에 도움이 된다, 수주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회계분식을 먼저 시인하였음.
- (위원) 지금 진술인이 주장한 것이 관례적으로 위법행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관례상 SI의 거래구조 자체가 복잡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위반했다는 것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것이 고의라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음.
- (보고자) 피조치자의 주장은 대부분 2021년 1월 26일 증선위

에서 제시되었던 사항으로 위반동기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 외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감리위 및 증선위에서는 위법동기를 '고의'로 판단했는데 그 주요논거를 보고 드리겠음. 첫 번째, 前대표이사의 지시 등임. 직원들은 前대표이사 ●●●이 상품 허위매출실적을 달성하도록 영업 압박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前대표이사는 상품 허위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마진을 회계분식 거래를 소개한 업체에 돌려준다는 내용의 기안문서에 수시로 결재를 하였고 회사의 회계책임자도 동 기안문을 중간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보관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하였음. 상품 허위매출 규모는 총매출액 대비 12%~30%에 달하는 등 대표이사의 지시 없이 영업부서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허위매출을 단행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고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도 없어서 영업부서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허위매출을 추진할 유인도 발견되지 않았음. 두 번째, 직원들의 조직적인 가담임. 허위매출 소개업체들과 수차례 Email을 주고받으면서 구체적인 매출 키워주기 진행 방식 및 발생한 마진의 반환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수시로 협의를 하였으며, 동 Email을 관련부서 직원들 간에 공유하며 발주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계분식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소개업체에 돌려주어야 할 마진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마진정산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 사실도 확인하였음. 세 번째, 회계분식 유인임. 2020년 5월 25일 금감원 현장조사 때 前대표이사는 회사의 회계분식 혐의 관련 금감원 직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회사의 매출이 확대되는 경우 수주에 유리하고, 보증기간 및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유리한 평가를 받

을 수 있고 IR에도 도움이 된다.”는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이런 점들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허위매출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8호 『국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국환거래법」상 거짓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는 내용

○ (위원)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이 죄질이 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데 조치안을 보면 과징금이 312만원이고 과태료가 700만원으로 되어 있음. 물론 적절히 평가하였겠지만 지나치게 작게 평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지금 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거짓자료 제출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거짓자료 제출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까지 가능한 규정이 있음.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 외국환거래 관련된 거래가 2018년 당시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거주자의 매입에 따른 해외송금의 거래임. 가상화폐 매입을 위한 송금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위법한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그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 법규에 명시된 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음. 그리고 이런 거짓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상으로 첫 사례였지만 다른 관련법규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기관주의나 경영주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음. 그리고 국민은행이 이런 거짓자료 제출에 의해서 과거에 처벌받은 전례가 없는 점과 업무정지가 됐을 경우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정지보다는 과징금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음.

○ (위원) 알겠음.

○ (위원) 이것이 작년 8월인가 9월에 논의됐던 사안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 (보고자) 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거짓자료 제출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임. 그러다보니까 제재심 이후에도 제재의 유형과 적정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체된 부분이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9호 『홍국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70호 『엠지손해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

치안』, 제71호 『악사손해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등 3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시세하락손해보험금을 과소·미지급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등 3개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부당하게 삭감해서 과소지급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소지급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지 궁금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금액들을 보니까 악사손해보험(주)같은 경우에는 55억원으로 규모가 상당히 큼. 55억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상당히 죄질이 커 보임. 그런데 조치안의 과징금을 보면 800만원으로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금액의 7분의1 수준에 불과함. 그런데 다른 2개의 보험회사를 보면 절반 이상을 지급했고 덜 지급한 금액도 600~700만원으로 적은 금액인데 과징금 금액은 악사손해보험(주)과 비슷함.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다른 계획이 있는지?

○ (보고자)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현재 전액 지급조치가 완료되었음. 연락 안 된 분들은 추후적으로 연락이 되는 대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임. 그리고 과징금 자체가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법규상 과징금 부과 체계가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이렇다 보니까 보험금 중 소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출되는 측면이 있고 보험금을 크게 지급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적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험업법 개정을 위해 금융위 보험과와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위원) 금융위 보험과는 과징금을 적정하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이 부분은 금감원과 협의 중이고, 조속히 법률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72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73호 『(주)KB손해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74호 『롯데손해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75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등 4개 손해보험사가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체결 및 모집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지난 안검소에서도 논의하였듯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산출기준에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를

테면 고의성에 대한 판단 부분이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부분을 각각 세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부분이나 고의성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스케일이 불균형하게 되어 있음. 예를 들면 위반 정도가 크거나 효과가 큰 것들은 '상'으로 '현저히 큰 경우'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중'에 해당되는 경우는 '경미하지 않은 경우'로 되어 있고 '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를 테면 '상·중이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음. '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굉장히 경미하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상'은 현저히 큰 것임. 그렇다면 '중'의 영역이 굉장히 넓은 영역이 됨.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산출하다보면 너무 과도하게 재량적인 판단이 가능한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상·중·하의 균형을 맞추든지 아니면 '중'의 영역을 위반 정도나 효과측면에서 맞춰 쪼개서 합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개정안이나 제도개선을 준비하실 때 반영했으면 함.

○ (위원) 일관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담아주시기 바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76호 『라이나생명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77호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라이나생명보험(주) 등 2개 생명보험사가 보험업법상 체결 및 모집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78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음. 첫째는 10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대해 잘 정의(define)가 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함. 왜냐하면 하루에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분, 몇 초에도 가변적인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100만 원과 잘 맞출 수 있을지, 세부적인 사항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정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이 해야될 일로 신고를 심사하는 업무가 있는데 물론 시행령이기는 하지만 구체화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보고자)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1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금액설정 문제인데, 이것은 시행령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하도록 구체화해서 내리고 있음.



그래서 오늘 입법예고를 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점, 이전 또는 매도를 하는 시점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표시하는 금액이 있음. 그 금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도록 할 예정임. 두 번째 말씀하신 신고 심사 부분은 통상적으로 금감원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도 수준에서 할 예정인데, 이번 심사의 경우에는 금융위에서 더 주도적으로 하는 쪽으로 가고는 있음. 현재 실무적으로는 신고 매뉴얼부터 금감원과 같이 작업을 해왔고, 이 절차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실과 논의해서 기존 예에 따라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음.

- (보고자) 참고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하게 됨.
- (위원) 그것은 법이 그러한지? 아니면 부담을 안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 (보고자) 시행령에서 그렇게 했고 법에서는 그렇지 않음. 법에서는 위탁도 가능하게는 되어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79호 『(주)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확인된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기관 및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안건 검토 소위원회 당시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선정되기 위하여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다른 은행들의 사정은 어떠한지
- (보고자)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과열경쟁이 있었고, 현재는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
- (위원) 본건은 해당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에 과다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사결정과정에서  
이사회에 대한 보고 등 법령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재하려는 내용임. 즉, 해당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은 약 1,000 억원인데  
이사회에는 그 중 약 600 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나머지 약 400 억원 부분은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임. 이사회에 대한 허위 보고는 형법상 배임죄 문제로  
보이는데,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 (보고자) 본건은 해당 은행이 '은행법' 등에 따른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것임. 형사법 문제는, 해당 은행의 임직원이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경영상의 판단'으로서 배임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위원) 본 사안은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제공을 통한 은행의 과당경쟁행위'를 제재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은 재산상 이익의 수준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 제공을 위해 거쳐야 하는 은행 내부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점을 문제삼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어서 법령의 적용이 적절한지 다소 의문이 있음
- (위원) 본건은 원안대로 처리하되, 금감원도 금번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유념하고 추후 검토 과제로 삼길 바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3) 보고안건 심의

- ☐ 보고안건 제4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후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 심사결과 보고』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5호 『케이비증권(주)의 이지스제37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사후 출자승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케이비증권(주)이 이지스제37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를 신청하였으나 심사중 펀드가 청산됨에 따라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6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7호 『2021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1년도 중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의 운영계획을 보고하는 내용

- (위원) 검사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안검소에서도 충분히 많이 논의를 했고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조정이 된 것 같아서 실무적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림. 금융위원회 과정에

서 많이 나왔던 반복지적 유형들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아울러서 혁신 이런 것들 때문에 IT 검사를 강화한다는 부분이 나왔었음. 사실 오늘 (주)신한은행 같은 종합검사를 보면 절반 이상이 다 IT임. 그런데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IT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반드시 제재하지 않아도 자진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임. 로그(log)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자료보관이 안 되어 있다든지, 공시를 안 했다든지 이런 내용임. 그래서 IT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검사의 수요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재로 연결시키는 것보다 사전에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반복지적 유형은 사전감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함.

○ (보고자) 잘 알겠음.

○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현장검사가 68%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 사전예방이 중요하겠음. (주)신한은행이 종합검사에서 방대하게 지적을 받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방대하게 지적받을 것인가 싶을 정도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전에도 똑같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음. 그래서 같은 은행에서 계속 반복적인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은행도 반복적인 것인지 분석해서 다른 은행에도 (주)신한은행이라고 특정하지 마시고 ‘A은행’ 이런 식으로 유사사례를 전파하면 좋겠음.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그때는 더 엄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하라고 준법감시인 내지는 자체 감사실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분들에게 별도로 설명이나 교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감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은행들이 예방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규사항이 없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쪽으로 반복지적 유형부분에 대해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음.

- (위원) 반복되는 작은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홍보나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함.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확인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림. 그리고 (주)신한은행도 세세한 것을 많이 지적한 것 같아서 한 편으로는 작은 지적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 편으로는 실무진이 고생을 많이 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가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것이 어떤 수준에 가면 자율을 확대해 주고 검사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됨.
- (위원)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스스로 예방을 해서 금감원이 지적할 것이 없고 금융위 회의에서 의결할 것이 없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상론을 이야기했던 것임. 금감원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격려의 말씀을 드림.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3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 48분 폐회)